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57
----------	------

2021년 3월 4일  
운 영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2. 5. 이상훈 의원 외 19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1. 2. 9.

다. 상정 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1년 3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포함한 시정 주요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의회차원의 관련 입법과 기후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음.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파리기후변화협약(‘16년 발효)과 UN 기후정상회의(‘19. 9)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sup>1)</sup>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sup>2)</sup>은 글로벌 의제가 됐으며, 코로나-19 발생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가속화되고 있음.
  - ‘19년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sup>3)</sup>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현재 전세계 경제규모의 3분의 2 이상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임.<sup>4)</sup>
- 이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글로벌 규제와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글로벌 新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sup>5)</sup>

1)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2) 인위적으로 배출한 탄소와 흡수한 탄소의 합이 영(zero)이 되는 상태를 말하며 탄소중립 사회란 탄소중립 상태를 달성한 사회,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20. 11.

3) 2019년 12월 출범한 새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EU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하고 EU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모든 정책 분야에서 기회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EU경제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을 발표함.

4) 글로벌경제, 이제 탄소에 울고 웃는다, 이코노믹리뷰, 2020.12. 7.

5)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에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동차 배출규제의 상향,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음.
  - 또한 구글·스타벅스·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sup>6)</sup> 참여 및 ESG(환경·사회·기업구조) 투자 확대<sup>7)</sup>, 환경 비친화적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sup>8)</sup>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됨.
- 우리정부도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시대를 맞아 지난 12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붙임. 1).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제시함(붙임. 2).
-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up>9)</sup>)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up>10)</sup> 정부안<sup>11)</sup>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지난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sup>12)</sup>함.

6)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現 260여개)

7) 전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규모(달러, GSIA): (14년)18조→(16년)23조→(18년)30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8)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 12. 7.

9)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10)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11)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 환 경부, 2020. 12. 15.

12)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은 각국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갱신) 및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 S)의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라는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붙임. 3)을 제시하고 있음.<sup>13)</sup>

<표-1>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주요내용

<p><b>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b>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p> <p><b>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b>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 효율 ↑),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p> <p><b>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b>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p> <p><b>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 ↓)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b>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p> <p><b>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b>  * 유희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 목재이용 ↑)</p>
---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17년 배출량(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하고,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을 명시하였음.<sup>14)</sup>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2020년) 제출을 요청함, 환경부 장관 브리핑, 2020. 12. 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환경부, 2020.12.15.

14)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환경부장관 브리핑, 2020.12.15.

<표-2> 감축목표 설정방식 비교<sup>15)</sup>

	절대량 방식	배출전망치(BAU) 방식
2030 목표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채택 국가	• 유럽, 미국, 일본 등 100여 개국	• 멕시코, 터키, 에디오피아 등 80여 개국
특징	• 명확한 감축의지 표명 •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공개 • 국제사회 높은 신뢰	• 경제성장 변동에 따른 BAU 가변성 • 국제사회 낮은 신뢰

-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발굴 및 배출권거래제도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환경부-산업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sup>16)</sup>
- 서울수도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 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 6,000억을 투입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붙임. 4)을 발표함.
  - '서울판 그린뉴딜'의 전략<sup>17)</sup>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5대 분야를 집중 추진해 '사람·자연·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 분야의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 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동시 다발적으로 병행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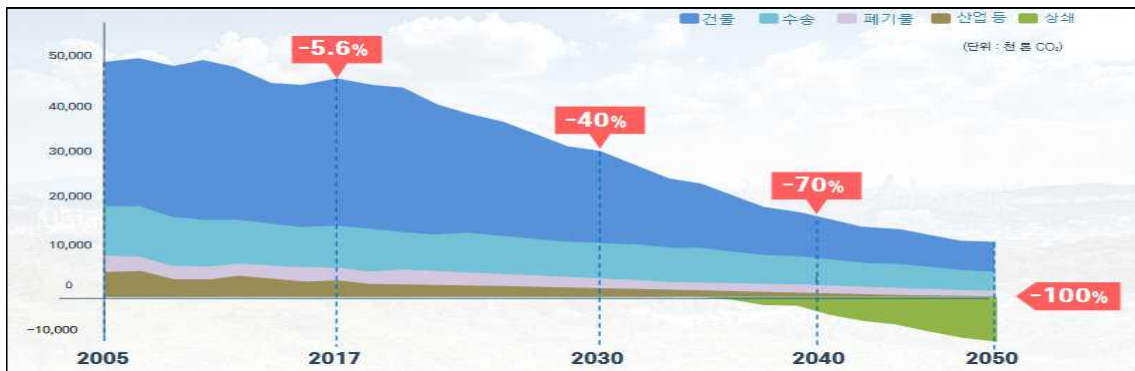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환경부, 2020.12.15.

16) 2050 탄소중립 논의 본격 개시, 환경부, 2021. 1. 29.

17)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7.

-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창출(’22년까지 총 2만 6천개)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1> 서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sup>18)</sup>



-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 되는 가운데<sup>19)</sup>,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구체화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붙임. 5)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 중 최초로 탄소중립 계획을 담은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2050 Seoul Climate Action Plan)’을 지난 12월 C40 도시 기후리더십그룹(C40 Cities-Climate Leadership Group)에 제출<sup>20)</sup>하였음.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① 그린 빌딩 ② 그린 모빌리티 ③ 그린 숲 ④ 그린 에너지 ⑤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 전략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한 연

18) 「서울시, 국내 처음으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C40 제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12. 29

19)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부총리브리핑, 2020. 12

20) 2005년에 설립된 기후변화대응을 약속한 대도시들의 모임으로 서울, 뉴욕, 런던 등 97개 회원도시로 구성된 C40은 파리협정을 계기로 온실가스 발생의 주요원인인 에너지 사용이 도시에서 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회원도시들이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뉴욕, LA, 런던, 파리 등 미국과 유럽의 22개 도시가 이미 제출을 완료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이 처음으로 제출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12. 30

차별 계획을 수립·점검할 계획임.

- 그간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sup>21)</sup>를 시작으로 ‘서울의 약속’<sup>22)</sup>, ‘태양의 도시, 서울’<sup>23)</sup>등을 추진해(붙임. 6) 왔으나, 각종 사회·경제적 여건 요인들이 감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임.<sup>24)</sup>
  -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이며, '18년에는 2005년 대비 4.8%<sup>25)</sup>의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그쳐 당초 목표로 삼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운 상황임.
- 또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이 중요한 시점임.<sup>26)</sup>

<표-3>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천톤CO2eq)

구분	200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49,445	46,817	45,673	45,646	46,986	46,685	<b>47,073</b>

-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서로 존중되는 세상 구현을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공동선언(붙임. 7)한 바 있음.
  - 지난 11월에는 전환도시를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 및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4대 목표 10대 핵심전략과제를 발표<sup>27)</sup>하고, 향후 서울시 전체 부서가 전환도시 핵심

21) 1·2단계 합산 추진 성과 652만T0E(2012 ~ 2020)

22)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23) 태양광 누적보급용량 291MW로 목표(584MW)대비 50% 달성(2017~2022)

24)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1. 1.

25) 2005년 49,445천톤CO2eq 대비 2,372천톤CO2eq 감소(△4.8%),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2021.1

26)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20. 11.

27) 「전환도시 서울을 만드는 실천전략(안)」 발표, 서울혁신기획관, 2020.11.26.



전략과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전환도시 기본계획」을 서울 예정임(붙임 8).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천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sup>28)</sup>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sup>29)</sup>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이 단순한 기후 문제만을 위한 해법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sup>30)</sup>인 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의 핵심요소가 탄소 중립,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지역순환경제인점 등을 고려했을 때,
-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부서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혁신기획관,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등 여러 상임위의 소관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sup>31)</sup>
- 다만,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sup>32)</sup>를 통해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미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와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8)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공동선언함. 2019. 9. 26.

29) 현재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도입,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무화, 신축건물ZEB 의무화,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태양광보급 확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등 관계부처에 건의안을 제출함.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2020. 7.

30) 그린뉴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의 극복 대안, 홍종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재정정보원, 2020

3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8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또한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효 중인 사정을 고려할 때,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sup>33)</sup>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결과,
  -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그린뉴딜(탄소중립)과 관련해 소위원회가 활동 중으로, 현 상황에서 유사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소관부서에 업무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정책변화에 수반되는 일자리·고용복지·개발사업 계획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후환경본부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여러 관련부서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므로 특위구성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임.
  - 기획경제위원회는 주된 이행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등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을 회신함.

33)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이상훈, 김기대, 김기덕,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현찬, 최 선,  
한기영, 황규복 의원(20  
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선언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음.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도시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실행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제시하며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의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 중립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임.
- 이러한 전세계적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작년 7월,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특히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탈탄소 도시로의 이행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모든 삶의 구조를 생태문명 중심의 녹색사회로 대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탈탄소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전략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임.

-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함.
-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하기에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견인해야 함.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기후예산제 도입, 총괄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선언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과감한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U, 영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도시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EU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며 주요 실행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세를 제시하며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재가입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정책의 연계, 고탄소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세와 같은 통상조치 도입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는 중국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바이든으로 세계는 탄소 중립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상황이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작년 7월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중앙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선언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해 가는 상황이다.

특히 2050 탄소 중립이라는 탈탄소 도시로 이행은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모든

사회·경제적 구조를 생태문명 중심의 녹색사회로 대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탈탄소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전략과제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사회적 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시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며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추진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서울시의회도 상임위원회간 업무 분장의 한계를 뛰어 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견인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자치구와 구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전담 예산제도 도입, 총괄추진체계와 민관거버넌스 구조 내실화 등을 통해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1년 월 일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일동**